

KIPF ISSUE PAPER No.107

통권
제107호

조세재정 브리프

2021. 1. 12
www.kipf.re.kr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cheung@kipf.re.kr

- 1 들어가는 글
- 2 중고차 시장 규모와 특징
-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요약

- ▶ 본고는 중고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원 파악 문제, 그리고 중고차 시장의 독특한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함
- ▶ 첫째,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 원리에 따라 10/110 제안
- ▶ 둘째,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이전보다 개선되었지만, 소비자와 공모하면 여전히 탈세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 셋째, 위장 당사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를 직접 매매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장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마지막으로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용 계좌 사용 등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권장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재호,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재정포럼』 제 291호(2020년 9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1 들어가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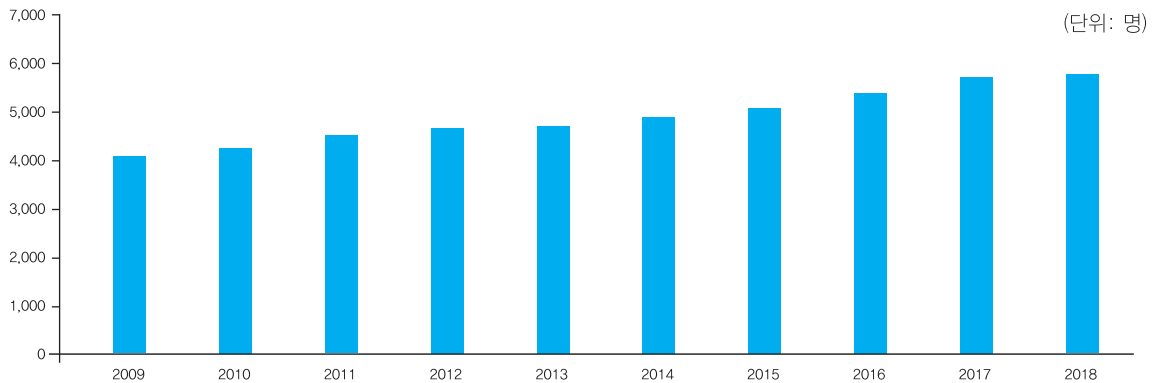
- ▶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고차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음
 -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고차 거래 대수가 신차 거래 대수보다 많아짐
 - 2018년 기준 중고차는 약 250만대, 신차는 약 180만대 정도 거래되었음
- ▶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원 파악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음
 - 중고차 사업자들은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세부담을 중고차 최종 소비자의 구매가격에 반영시켜 중고차 가격을 인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중고차를 개인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정확한 중고차 매입가격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중고차 사업자들의 사업소득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중고차 사업자 이외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고차 매매딜러가 중고차 사업자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들 중고차 매매딜러의 소득 등도 파악하기 어려움
- ▶ 본고는 중고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중고차 시장의 독특한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함

2 중고차 시장 규모와 특징

① 중고차 시장 규모

-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사업자 수는 2008년 이전에는 약 4천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5,800명으로 증가했음

[그림 1] 중고차 사업자 수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사업자업체 현황분기」,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437&hFormId=4392&hSelectId=4392&sStyleNum=855&sStart=201903&sEnd=201903&hPoint=00&hAppr=1>, 검색일자: 2020. 2. 10.

- ▶ 중고차 이전등록 대수는 2018년에 약 253만대로, 이 중 당사자 개인 간 이전등록이 약 136만대이고, 사업자에 의한 이전등록 대수는 약 117만대임
 - 중고차 거래 규모는 중고차 이전등록 건수를 이용해 살펴볼 수 있음
 - * 중고차 이전등록 건수 중 증여·상속 등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 건수는 제외함
 - 당사자 개인 간 중고차 이전등록 건수는 약 136만건, 사업자에 의한 이전등록 건수는 약 234만건임
 - 이 중 사업자 거래는 동일한 중고차에 대해 두 번의 이전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등록 건수(약 234만 건)의 절반이 이전등록 대수(약 117만대)가 됨
- ▶ 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 대수가 중고차 사업자를 통한 거래 대수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음
 - 개인 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자와 매매자 연결, 중고차 이전신고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음
 - 업계에서는 당사자 간 거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거래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일부 중고차 사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음



〈표 1〉 유형별 자동차 이전등록 대수 추이

(단위: 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사자 거래	1,348,524	1,331,478	1,259,750	1,329,022	1,374,418	1,389,461	1,357,753
사업자 거래	936,166	988,322	1,070,678	1,131,187	1,163,869	1,134,713	1,167,909
합계	2,284,690	2,319,800	2,330,428	2,460,209	2,538,287	2,524,174	2,525,662

주: 이전등록 대수는 당사자 거래 이전등록 건수와 사업자 거래 이전등록 건수의 절반 값을 합쳐서 산출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보고」,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pr=1>, 검색일자: 2020. 2. 10.

②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 현재 중고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¹⁾를 운영하고 있음

- 중고차 사업자들은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중고차가 '자동차'라는 본래의 수송 기능을 유지하면서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면 이미 신차를 구매할 때 납부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중복 납부되어 해당 중고차 구매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③ 중고차 매매 방식과 특징

▶ 중고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시설 면적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려면 매매업자 1인당 전시설이 660㎡ 이상 있어야 하고, 이 전시설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런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고차 매매딜러가 참여하는 형태로 중고차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상사 대표가 제휴 중고차 딜러들에게 매매상사(대표)의 명의로 중고차를 사고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각 중고차 딜러들은 독립적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매매상사 대표에게 중고차 매입자금 융통²⁾에 따른 이자 및 원금상환, 사무실 관리비 등을 지불함
- K Car, 엔카 등 기업형 사업자들은 매매딜러가 아닌 직원을 고용해서 영업을 함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서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임
 2) 매매상사 대표만이 중고차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매상사 대표가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중고차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 딜러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을 융통해 주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는 구조

- ▶ 현재 중고차 거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 사업자보다는 중고차 매매딜러들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중고차 매매딜러가 독립적으로 중고차 매입과 매출을 하지만 이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명의를 중고차 사업자인 매매상사 대표로 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음
 - 과거에는 극단적으로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가 중고차 딜러들의 중고차 판매 규모를 전혀 모르면서 단순히 사무실 사용료 등의 비용만 받는 경우도 있었음
 - 이 경우 중고차 거래는 이루어졌지만 중고차 딜러의 소득은 파악되지 않으면서, 거래 명의자인 매매상사 대표의 소득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그러나 현재는 매매상사 대표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의무 발급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의 매출이 드러나고, 매매상사 대표에게 원천징수 의무도 부여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제언 1)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 원리에 따라 10/110 제안

- ▶ 중고차가 '자동차'라는 본래의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신차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잔존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고차 구매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혹은 9/109로 낮춰서 적용한 적도 있음
 - 부가가치세율이 10%이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혹은 9/109로 낮춰서 적용하는 것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제언 2)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소비자와 공모하면 여전히 탈세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 2017년부터 중고차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됨
 - 모든 중고차 거래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후 적발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됨



-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중고차 매출액 규모가 이전보다 투명해지고 부수적으로 매입 금액을 낮출 경우 세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가 신고에 따른 탈세 유인이 일부 감소함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이후 평균 취득세 신고가액이 상승했고,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높은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전후 중고차 취득세 신고가액의 평균값 및 중위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가 전체 약 27.7%에서 약 41.4%로 상승하였음

〈표 2〉 현금영수증 의무화 전후 중고차 취득세 신고가액 비교

(단위: 건, 원)

구분	표본 수	평균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
시행 전	1,227,579	5,941,046	2,700,000	0	518,181,824
시행 후	1,018,306	7,178,103	3,700,000	0	550,000,000

자료: 윤상호·신미정(2019), p. 56, 〈표 III-7〉을 이용해서 저자가 재구성

〈표 3〉 유형별 자동차 이전등록 대수 추이

(단위: 건, %)

구분	표본 수	신고가액 = 0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시행 전	1,227,579	164,929	881,121	7,035	339,423
	100.0	18.7	71.8	0.6	27.7
시행 후	1,018,306	133,333	591,255	5,793	421,258
	100.0	22.6	58.1	0.6	41.4

자료: 윤상호·신미정(2019), p. 58, 〈표 III-8〉을 이용해서 저자가 재구성

- ▶ 다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모해 매출액을 낮추거나 위장 당사자 거래를 통해 탈세를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다만 이런 탈세는 소비자 공모가 필수적이고, 실제 입금기록과 현금영수증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제언3) 중고차를 직접 매매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장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위장 당사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들이 제출되었음
 - 그 개정안 중에 개인 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를 직접 한 경우에는 은행 입금내역서 등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위장거래를 방지하려는 법안이 있음
 - 다만 소수의 위장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 간 정상적인 거래를 제약하면서 서류 제출 등의 행정비용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 이 개정안을 완화해서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의무 제출하지 않고 일정 기간 안에 과세 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장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당사자 거래의 거래 자율성과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전에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넛지효과(Nudge effect)를 통해 위장거래를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제언 4)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용 계좌 사용 등을 유도해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중고차 거래에서 실질과 명의를 다른 이중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임
 - 중고차 딜러는 실제 자신이 직접 매입과 매출을 진행하지만 중고차 사업자가 아니어서, 거래 명의를 소속 매매상사(대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중구조임
 - 중고차 딜러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과도 차이가 있음
- ▶ 중고차 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로서 사업자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윤상호·신미정, 『현금영수증 발행과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3.
정재호,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재정포럼』 제 291호(2020년 9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pp. 30~48.

<웹 사이트>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사업자 업체현황분기」,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437&hFormId=4392&hSelectId=4392&sStyleNum=855&sStart=201903&sEnd=201903&hPoint=00&hApr=1>, 검색일자: 2020. 2. 10.
_____, 「자동차 등록현황보고」,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r=1>, 검색일자: 2020. 2. 10.

